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신 : 각 언론사 교육·사회부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청소년인권활동가와 교육부 관계자 면담(총3매)

날짜 : 2006.06.29

문의 : 배경내(017-214-3550), 전누리(016-297-9803)

청소년인권활동가와 교육부 관계자 면담 결과 논평

- 인권 신장과 정론보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이 참여한 '5.14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이하 5.14집회 준비위)에서는 지난 5월 14일 두발자유와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거리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정책에 관한 교육부에 입장을 묻고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제 6월 28일 교육부와의 면담이 성사되어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면담을 위해서 5.14집회 준비위에서는 실제 학교현장을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 3명을 비롯한 청소년인권활동가 총 10명이 참석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김영운 초중등교육정책과장, 오석규 교육연구관, 김석연 교육연구사가 참여해 학생인권정책에 대해 2시간 30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어제 면담에 대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논평] 교육부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학생인권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 두발자유 바로 지금!” 행사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향후 정책을 듣기 위해 교육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마침내 6월 28일 그 자리가 마련되어 학생인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준비위원회의 일부로서 참가하였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의 무례

그러나 그 면담의 내용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장 김영운 씨가 면담자리에서 보여준 태도와 낮은 인권의식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5.14 행사를 필두로 계속해서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면담은 그동안 침묵하던 행정당국이 그 요구에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었으며,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소중한 자리였다. 김영운 씨는 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의를 갖추고 진지한 자세로 면담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김영운 씨는 본래 5시였던 면담 시작이 약 30분이나 늦춰지도록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으며 다른 일정이 바쁘다며 10분 정도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한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공적인 자리임에도 처음부터 반말을 하여 은연중에 청소년들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드러냈고, 두발규제에 대해서는 참석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그 정도로 길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를 단순한 머리길이의 문제로 취급하는 등 미흡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 우리는 행정부처의 책임자가 이와 같은 무례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실망을 표하며, 부디 교육부가 앞으로는 이런 점에 더 주의해주기를 바란다.

인권의식, 책임의식, 현실인식 부족이 아쉬워

2시간이 넘는 긴 면담에 성의를 갖고 임해주신 교육연구원 오석규 씨와 교육연구사 김석언 씨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 그러나 오석규 씨의 발언에서 여러 번 확인되었듯이 교육부의 입장이 여전히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두발규제를 정하라.”라는 식의 ‘합의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한다. 인권의 원칙은 합의와 다수결만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노력(“투쟁”)과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강조하는 김석언 씨의 이야기는 정부 담당자의 것으로서는 부적절했다. 민주화나 사회 변화가 법령이나 공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담 자리에서 정부의 책임과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노력’을 주문하는 김석언 씨의 어조는 비록 원론적으로 옳다고는 해도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오석규 씨와 김석언 씨는 우리가 20여 일 동안 nocut.or.kr을 통해 모은 44건의 학교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또 학교에서 실제로는 ‘민주적인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였으나, “부당하게 체벌하면 경찰에 신고하라.” 등의 이야기를 하여 현재 학교와 청소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교육부의 구조 개편 필요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은 단순히 담당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교육연구사들의 15가지가 넘는 업무 분류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교육연구사 하나가 전담하고 있는 데 비해 학생인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사는 인성교육, 청소년정책 분야 등 세 분야를 한꺼번에 맡고 있다. 오석규 씨 또한 면담에서 학생인권을 여러 업무를 다루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사소한 일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교육부가 학생인권 분야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었다. 11,0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여 유일한 담당자인 김석연 씨가 쏟아지는 민원들만 상대하기도 벅차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은 결코 교육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이며, 따라서 학교를 인권침해의 장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학교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인권보장이야말로 교육의 밑바탕이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인권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며, 인력도 더욱 충원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보장 정책 수립과 수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종합대책은 학생입장 중심으로

우리는 이처럼 열악한 업무 환경에도 교육부의 김석연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7월부터 조사를 하여 11월까지 학생인권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법령 제·개정까지도 필요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오석규 씨와 김석연 씨의 말에 한층 더 기대를 걸어본다.

하지만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학생인권 대책은 학생의 입장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인권 정책을 세울 때 비장애인의 입장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을 더 중시하듯이 학생인권 대책 또한 학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김석연 씨 등은 학부모와 교사,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이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입장보다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행여나 일부 교육부 관계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때문에 학생인권종합대책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교육부의 학생인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진 건설적인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하는 일들이 단순히 전시용 행정이나 공문 몇 장 보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들어온 민원들만 해결하는 수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 문제에 투입하는 인력과 자원부터 늘려야 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교육부가 더 이상 공허한 핑계를 대지 말고 건설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6년 6월 2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